

“주택공급대책 본격 논의”

김윤덕 국토부장관 “11월부터… 부서 내 주택공급본부 만들 것”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11월 본격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11월부터 주택 공급대책을 확인하고 논의할 것이다”며 “국토부 책임 하에 부처별 장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 본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응과 관련, 김 장관은 “갭투자(전세 계약을 긴 매수) 요소가 시장에 진입한다고 판단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이유로 지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조환)의 폐지에 대해 김 장관은 “재조환 폐지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촬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해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공식 기념촬영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사진=뉴시스 제공)

도 “바이오·창업·올림픽 유치 등 현안 다채”

이번주 주요 일정 발표

생명경제 바이오 포럼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하계올림픽 브리핑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날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달 3~8일 도청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날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월 3~8일에는 도청 현안과 주요 행사가 유난히 많다”며 각종 일정과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3일에는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2025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포럼’이 열린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으로 참여해 3개 주제 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되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같은 날에는 ‘제10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이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개막, 이틀간 창업기업 전시와 선포식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

4일에는 국회에서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결의대회 및 토론회’가 열린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주도하며, 경찰 인제 양성기관 유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익산에서는 ‘2025 익산 비터 코리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대회’가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전북도는 김바브웨와 이집트 체육인 관계자 등 14명을 초청해 스포츠

외교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5일에는 전주 하계 올림픽 관련 추진단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고, 김관영 도지사의 국회 예산 확보 활동, 고창군 농협 간담회, 패럴림픽 글로벌 비즈포럼 참석 등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전북도·전북대·원광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최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식’이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같은 날 장수실내체육관에서는 ‘민생상생 공동체 결의대회(새마을지도자대회)’, 진안군 백운면에서는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공식 개원식’도 개최된다.

7일에는 제15회 시·군 공무원노조 연맹 노사한마음대회가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리며,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8일에는 전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며, 도내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체험행사로 준비된다.

이밖에도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4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지원 TF 회의(6일) △국기예선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착공식 △금용중심지 개발계획 공청회 등 굵직한 일정이 연이어 이어진다.

김철태 대변인은 “전북도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례 브리핑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도청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육회관에서 열리며,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8일에는 전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며, 도내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체험행사로 준비된다.

이밖에도 △익산 농업기계 박람회(4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지원 TF 회의(6일) △국기예선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착공식 △금용중심지 개발계획 공청회 등 굵직한 일정이 연이어 이어진다.

김철태 대변인은 “전북도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례 브리핑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도청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행감·예산 심사 앞두고 연찬회 개최

전주시의회는 지난날 31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날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열렸으며, 전주시의회는 지난 9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내기 위해 개최 장소를 군산으로 정했다.

연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전략과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 의원들의 대시민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상호간 협력을 통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정보 공유 등도 이뤄졌다.

남관우 의장은 “연중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



사를 앞두고 의회의 방향을 점검한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연찬회를 비롯해 늘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평화의 한반도 구현 활동 펼칠 것”

김영복 민주평통 제22기 전북 부의장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날 31일 제22기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에 김영복(66) 법무법인 모악 고문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 2만2,000여명을 제22기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지역은 총 1,19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평화통일 정책자문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영복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은 “22기 민주평통 전북지역 1,192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통일준비를 위해 평화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께 자문·건의하는 한편 평화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부안 원전비상계획 구역 시군, 정부 재정지원 확정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차별받아온 재정지원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날 31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전북 고창·부안 등 비(非)원전 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 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 등이 동일 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소재지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 인근 전남 무안·장성·함평군이 받는 조정교부금과 동일한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올해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약 24억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결정은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1년여 만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현실화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이어오며 지역의 오랜 불균형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 안에 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정됐다”며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얻은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방재 인프라를 강화하는 첫걸음일 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윤석열 검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의원 무혐의

검찰, “새로운 범죄 혐의 확인하기 어렵다” 결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진행한 검찰과 징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에 대해 재수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날 31일 “윤 전 대통령 검찰자료 취득 및 사용 사건과 관련하여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관련 기록과 법리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12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변은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찍

어내기 검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이들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검찰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내 윤 전 총장 징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법무부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찰위원회에 제공한 행위는 외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변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후 2년여간의 재수사 끝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상담받아보세요

사업내용

공사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 지원, 농지는 임대 후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

지원절차

STEP 01.

농어촌공사에
농지 매도

STEP 02.

매도대금으로
부채 상환

STEP 03.

매도한 농지
임대로 경작

STEP 04.

농지환매
(=농지 다시 매수)

지원대상

-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재해피해율 50%이상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
- 영농경력 2년 이상
- 70세 미만(1955.1.1 이후 출생자)
-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

지원조건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연 임대료 : 매입가격의 0.5~1% 이내
- 임대기간 : 7년(3년 연장 가능)
- 환매방법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10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문의 | 063-650-7030